

大學教育의 大衆化와 高學歷 失業

宋 柄 淳
(嶺南大 教育學科)

1. 問題提起

해방 후 한국 사회가 구조적 변동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한국의 대학교육은 실로 놀라운 양적 성장을 한 것이 사실이다. 대학교육의 양적 팽창은 보다 많은 사람에게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주고 고급 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관성과 장기적 안목의 결여와 양적 팽창에 따른 필요한 교육 조건을 마련하지 못한 나머지 대학다운 대학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大學教育의 質的 低下 현상과 高學歷 失業者 문제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많은 신생 독립 국가들이 산업화·근대화할 서두른 과정에서 서구 선진국 교육 제도의 무비관적 이식으로 부실한 과잉 교육과 고학력 실업자 문제로 골치를 앓듯이 우리도 똑같은 문제로 심각한 진통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예컨대 올해 8월 6일 서울시 9급 공무원 채용 시험의 경우 6백 30명 모집에 7천 5백 명이 응시, 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지원자의 절반 정도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였다는 것은 대졸자의 취업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를 드러낸 단면이라 할 수 있

다. “능력보다는 자리가 문제이다”라는 말은 대학 사회의 유행어가 되었고, 전쟁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치열한 대학 입시보다 대학 졸업 후 취직이 더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것만 보아도 대학교육을 받은 자들의 취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충분히 짐작케 해주고 있다.

금년 8월 22일 20개 그룹사를 대상으로 한 某일간지 경제부 조사에 따르면, 올 가을 대졸 사원 채용 규모는 작년보다 12% 정도 줄어들 전망이라 한다. 또 업계에서는 ‘自動化 失業’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즉 지난 '87년 이래 3년간의 노사 분규로 골치를 앓아 온 기업들은 자동화 설비 투자를 하는 등으로 서서히 인력을 줄이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볼 때 경제 상황의 급격한 호전이 없는 한 대졸자들에 대한 고용 사정은 상당 기간 더 악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고학력 실업자 문제는 앞으로 더욱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하고 교육하는 일에 전념해야 할 교수가 졸업을 앞둔 제자들을 취직시키기 위해 ‘구직 대리 전선’에 나가야 할 형편에 이른 오늘의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까?

무엇보다도 먼저 고학력 실업자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대학 입시 제도 문제 못지않게 큰 비중을 가진 교육 문제라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 안목에서 이 문제에 대한 유효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교육비와 시간의 투자를 요하는 고등교육은 개인의 자아 실현과 국가·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대졸자의 취업을 어렵게 하고 고학력 실업 문제를 야기한 요인은 여러 가지여서 간단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근본적인 요인은 無原則한 大學教育 政策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누가 뭐라고 변명해도 오늘의 대졸자 취업과 관련된 고학력 실업 문제는 산업 구조의 장기 발전 전망, 현실적 교육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립된 대학 정원 정책의 결과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급속한 대학교육 인구의 양적 성장을 초래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의 하나인 고학력 실업 문제를 야기시킨 大學 定員政策의 虛實을 살펴 보고, 대졸자 취업 문제와 관련하여 고학력 실업의 실태와 그 원인을 검토해 봄으로써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 보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大學教育의 大衆化와 定員政策

해방과 더불어 우리나라 대학은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한다는 입장에서 그 문호가 개방되었고 알게 모르게 대학교육의 대중화 현상이 이루어졌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수는 총 1백 38만 7천 1백 70명이라 한다. 해방 당시 학생 수 7천 8백 79명에 비해 무려 176 배가 증가한 셈이다.

이렇게 고등교육 인구가 증가한 요인으로는 사회적·국가적 측면에서 산업화에 따른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의 증대와 개인적인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에 따른 포부와 압력의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에 비해 시설 부족, 교수 요원의 부족, 강의실 및 연구실 등 절대 공간의 상대적 부족은 대학의 질을 저하시키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제도적 시행 착오와 정책적 우여곡절은 내실 있

고 대학다운 대학의 발전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정책 당국은 그 책임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 날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많은 제도와 정책들이 한결같이 대학의 발전과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말았다.

1955년 대학 설치 기준령이 대학의 양적 팽창을 막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지만 기준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고, 1961년 5·16 이후 정부에 의한 대학 정비 작업도 4년을 넘기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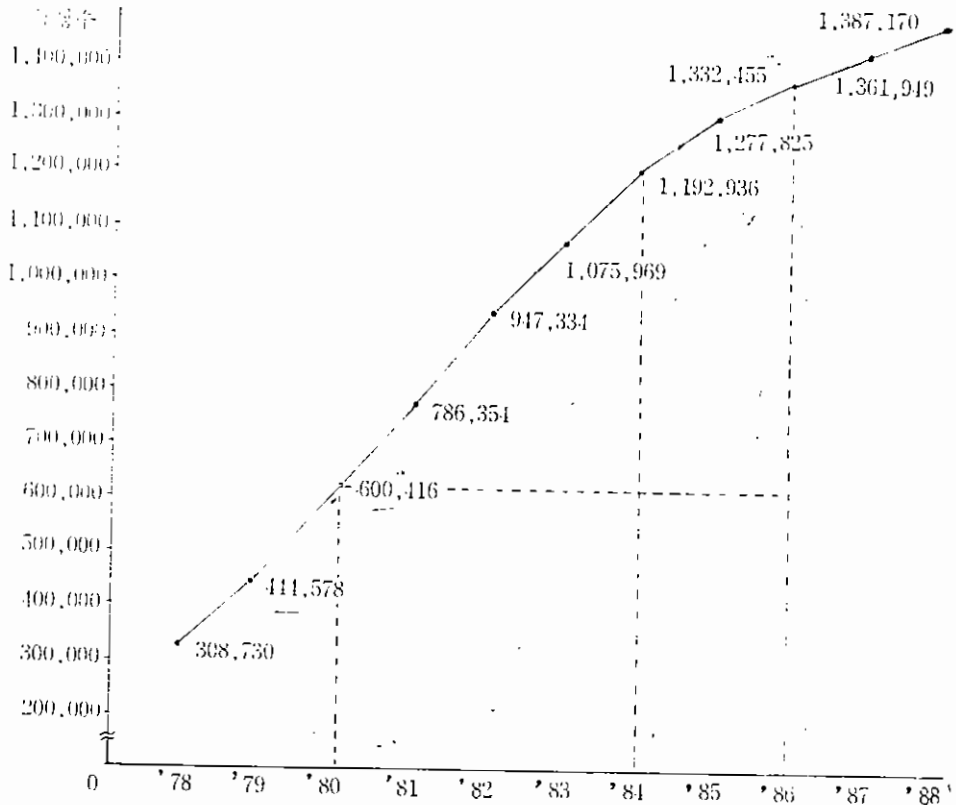
당시 군사 정부는 대학 입학 자격 국가고사 제도 및 학사 자격 국가고사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리라 기대했지만, 1964년 국가고사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또 다른 시행 착오가 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1965년에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사 및 석사의 문교부 등록 규정과 대학생 정원령을 제정·공포했지만, 실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립대학에서는 정강생을 모집함으로써 정원령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는 1968년 대학 입학 예비고사령을 공포하여 1969년도부터 실시함으로써 사립대학에 대한 입학 정원 단속과 대학생의 질을 높이는 수단으로 삼았다. 그 후 1980년대에 접어들어 대학 입학 예비고사를 대학 입학 학력고사로 개정하였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이 있었지만 대학생 정원과 관련하여 말한다면 1980년은 획기적인 전환을 시도했던 해라 할 수 있다.

1980년까지 대학생 정원을 지나치리만큼 억제해 오던 정부가 입학 정원제를 졸업 정원제로 바꾸면서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폭적 증가를 시킨 1980년에서 1984년 사이에 무려 74만 8천 3백 58명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졸업 정원제가 유명무실해진 1986년을 기준으로 1980년에서 1986년까지 늘어난 고등교육 기관의 학생 수는 88만 7천 8백 77 명이나 된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불과 5~6년 사이에 무려 90만 명에 육박하는 학생 수를 갑작스럽게 늘려 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듯 장기 전망을 고려한 정원 정책이라 할 수

〈표 1〉 최근 10년간('78~'88) 고등교육 학생 수 증가 현황



자료 : 문교통계연보, 1988.

있겠는가? 이와 같은 고등교육 정원 정책은 오늘의 심각한 대졸자 취업 문제와 고학력 실업의 문제를 야기시킨 직접적 원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현실과 사회 발전 전망에 대한 주도면밀한 분석이 없이 이루어진 '80년의 교육 개혁과 대학 정원 정책은 無原則·非教育的인 것으로 이 나라 교육 질서를 파괴한 결과를 가져왔고 해도 결코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3. 高學歷 失業의 實態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 결과라 볼 수 있는 고학력 실업자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고등교육 결과의 분배와 관련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다.

문교부가 집계한 고등교육 기관별, 즉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자의 취직 현황을 살펴 보면 그 심각성은 더욱 뚜렷해진다.

위의 〈표 2〉를 중심으로 '88년도 대학(교) 졸업자의 미취업 현황을 살펴 보면 전체 졸업자 중 순수하게 취업한 사람을 뺀 나머지를 미취업으로 볼 때, '88년 2월 졸업자 중 9만 1천 51명이 무직이거나 미상, 군대 입대 등으로 전체 졸업자의 56.3%가 대학에서 연마한 전공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최근 몇 년간의 미취업 현황은 '87년도의 경우는 전체의 59.4%에 해당되는 8만 8천 1백 64명, '86년도에는 56.4%로 8만 6천 1백 61명, '85년도에는 전체의 59.1%에 해당되는 7만 32명이 미취업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은 물론 금년의 경우 대기업이 작년에 비추어 약 12% 정도 신입 사원 채용을 감축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미취업자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남·여 취업률을 비교해 볼 때 고학력일수록 여성 취업의 기회가 대단히 좁다는 것이다.

〈표 2〉 고등교육 기관별 취업 및 미취업 현황

()는 %

구분	기관별 성별	전 문 대 학			대 학(교)			대 학 원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진 학		3,200 (7.6)	2,652 (6.4)	5,872 (7.0)	8,943 (8.6)	2,994 (5.1)	11,937 (7.4)	1,581 (9.4)	291 (7.0)	1,872 (18.9)
취 업		14,858 (35.3)	23,236 (56.5)	38,094 (45.8)	53,268 (51.9)	17,464 (29.7)	70,732 (43.7)	11,990 (71.0)	2,292 (55.4)	14,282 (67.9)
입 대 자		19,056 (45.3)	—	19,056 (22.9)	10,261 (9.9)	—	10,261 (6.3)	1,009 (6.0)	—	1,009 (4.8)
무 직		2,951 (7.0)	9,341 (22.7)	12,292 (14.8)	20,635 (20.0)	25,883 (44.1)	46,518 (28.7)	690 (4.1)	920 (22.3)	1,610 (7.7)
미 상		2,013 (4.8)	5,933 (14.4)	7,946 (9.5)	10,172 (9.9)	12,363 (21.1)	22,535 (13.9)	1,614 (9.5)	632 (15.3)	2,466 (10.7)
계		4,278 (100)	41,162 (100)	83,240 (100)	103,279 (100)	58,704 (100)	161,983 (100)	16,884 (100)	4,135 (100)	21,019 (100)

자료 : 문교통계연감, 1988.

'88년의 경우 남자는 51.6%가 취업한 데 비해 여자는 29.7%만이 취업의 기회가 주어졌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87년 전체 여자 졸업자 중 27.4%, '86년 26.8%, '85년 29.8%만이 취업의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여자 졸업자 중 평균 약 70%가 무직 내지 미상의 실업자로 나타나 있는 바 이는 성별 조건에 따라 고용 기회가 달리 주어져 여자의 경우 고학력 실업자 비율이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 졸업자의 실업률 변화 추이를 전공 계열 및 성별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뒤의 〈표 3〉과 같다. 〈표 3〉은 다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모든 전공 계열에서 여자 실업률이 남자 실업률보다 높다는 점이다.

둘째, 남자의 실업률은 자연계와 사회 계열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여자 실업률은 사범계와 인문계, 특히 사범계에서 가장 높다. 이는 여자로서 하여금 사범계 대학 지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는 요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셋째, 실업률은 연도별 변동 폭이 노동 수요 예측이 가장 용이한 사범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대학 정원 정책에 노동 수요의 전망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거나 비록 대학 정원을 조정하거나 예측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실업률이 전공 계열별로 극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대학의 학과 운영의 경직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뒤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의 격차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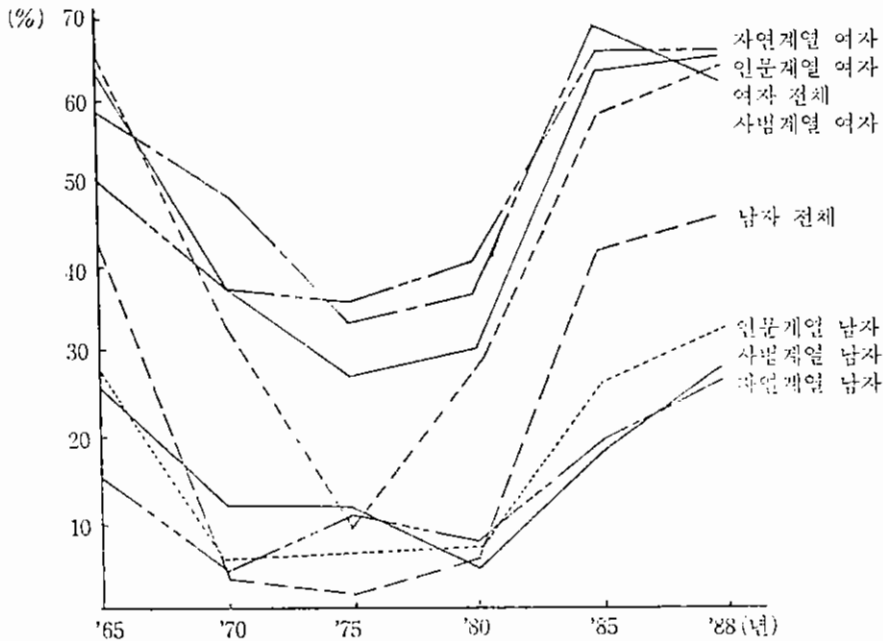
이와 같이 고학력자에게 취업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평생 직장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갖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들로 하여금 많은 시행 착오를 겪게 한다는 점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대졸자 취업과 관련하여 고학력 실업의 실제적 유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교육이 교육 기능을 통하여 창의성과 도덕성을 지닌 전인을 육성하고, 연구 기능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며, 봉사 기능을 통하여 사회 문제의 해결과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마다 졸업생의 상당 수가 고학력 실업자로 남아 있다는 것은 대학교육의 기본 목적을 의심케 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낭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88년의 경우 인문 계열 졸업자 35.9%, 사회 계열 48.3%, 자연 계열 47%, 사

〈표 3〉 대졸자 계열별 실업률



출처: 이효수, 고학력화와 대졸 실업, 1989.

범 계열 30.3%만이 취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를 증명한다.

인력에 대한 수요 그리고 고용 기회 일반에 비해 졸업생 수가 지나치게 많아 대학교육 기관에서 언마한 자신의 직종을 찾지 못해 고학력 실업자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가 하면, 어렵게 주어진 취업의 기회라 하더라도 그 자리가 평생 직장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취업 재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자신의 전공 영역과는 전혀 무관한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인의 자아 실현은 물론 국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고등교육의 기본 목적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발전 전망과 산업 구조 등에 대한 주도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정원 정책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4. 高學歷 失業의 發生 原因

고학력 실업은 현실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기대 좌절의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실업과 과잉

교육의 난맥상이 과연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인가?”는 개발도상국, 저개발국가, 제3 세계 나라들에 있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 있다.

ILO와 IBRD의 연구에 의하면 이 문제에 대한 지배적 견해는 인구 요인,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 잘못된 교육 정책, 교육 체제의 제도적 결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서구 산업 사회와는 상이한 경제 구조와 생활 조건 및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저개발 사회에서 고도의 기술과 유동적이고 탄력성 있는 노동력에 기초를 둔 경제의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고안된 서구식 학교 교육을 표방함으로써 교육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보다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이라는 측면 및 한국 고등교육 제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들 문제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 勞働 市場의 不安定性의 측면이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졸 실업자의 증가 이

유로 “사회의 필요보다 대졸자 수가 많다”는 응답이 47.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산업 구조의 불균형 발전’으로 보는 사람이 17.4%로 나타났다. 이들 결과로 볼 때 오늘날 우리가 골치를 앓고 있는 고학력 실업자 문제는 고등교육의 정원 정책 측면과 산업 구조의 문제가 함께 결부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경제 성장 위주의 정부 시책과 정·경 유착에 따라 대기업 위주의 경제권 독점,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지 못한 채 기인하는 지역간 발전의 불균형 현상, 최근 몇 년간 거듭되어 온 노사 분규, 사회 경제 발전의 속도보다 빨랐던 인구 증가 요인 등은 현실적으로 노동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대기업 육성 정책은 고급 인력의 수요를 대기업에 어느 정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졸자들이 중소기업 내지 제조업을 기피하고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은 이를 증명해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지방 대졸자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대졸자의 취업률이 높다는 것은 지역간 균형 발전을 기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방대학 출신의 취업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대학 졸업자 중에 상대적으로 실업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사 분규로 말미암아 대기업 경영자들의 ‘사람쓰기 기피 현상’은 더욱더 많은 실업자를 낳게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는 대졸자의 취업에도 영향을 미쳐 고학력 실업의 문제를 더욱 가중시킨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날 고학력 실업자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 산업계의 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보다는 대입 재수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학 정원을 증가한 나머지 합리적인 고등교육 정원 정책을 수립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오늘의 고학력 실업 문제와 관련하여 고등교육 內的 要因을 간과할 수 없다.

오늘날 고등교육 인구, 즉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을 총망라해서 약 14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고등교육 인구의 양적 성장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고학력 실업자 문제를 야

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무릇 교육은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지나친 것은 아니지만 만약 教育觀이 잘못 설정된 것이라면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현실지향적 삶의 태도, 노동 시장에 있어서 고학력자 우대 정책, 문벌 중심적 가치관 등은 무조건 대학에 들어가야 사람 대접 받는다는 학벌 중심주의 교육관으로 연결되어 고등교육을 입신 출세의 수단 내지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한 나머지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 주된 원인이 되었고, 이는 개인적·국가적으로 많은 교육비와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고학력 실업자 문제를 발생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다.

고학력 실업자 문제를 야기한 사회·교육 정책적 측면을 살펴 보면 산업화·공업화에 시기적으로 선행하여 의무 교육화, 고교 평준화, 고등교육 기회 확대 정책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는 학력간 임금 격차를 가져오게 한 사회·문화적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학력간 임금 격차는 한껏 고등교육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결과를 조장했음은 물론 대학생과 학부모들로 하여금 고학력 실업자 문제 등 많은 기대 좌절을 맛보게 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고등교육의 기본 목적을 도외시한 고등교육 정책 및 사회 정책에 많은 결함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5. 맺는 말

인류 사회는 고도의 기술·정보 사회, 개방 사회, 국제화 사회 그리고 다변·다원화 사회로 급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사회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외일 수는 없다.

이처럼 급변하는 시대와 사회에 있어서 고등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대학교육에 대한 일반의 요구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사회 일반의 고등교육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여 대학을 발전시키는 데는 현실 상황과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이루어야 한다.

이제 대학교육의 大衆化 현상은 우리 사회의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획기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고학력 실업자 문제는 하나의 사회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학력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교육적 노력과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대학의 대중화와 고학력 실업에 대한 문제 진단을 토대로 그 해결 방안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과거 대학의 양적 성장 과정을 대학교육의 질적 발전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양적 대중화는 질적 대중화를 가져오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대학교육의 내실을 도모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대학교육에 있어서 학생 인구를 결정하는 일을 정부에서 독점하기보다는 학생 선발, 정원 조정 등을 각 대학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융통성 있게 자율적으로 해당 대학 나름대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학문과 교육을 생명으로 하는 대학 사회는 정부에 의한 외부적이고 타율적 통제보다는 내부적이고 자율적인 통제와 주체적 노력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셋째, 대학교육의 획일적 대중화보다는 다양성이 있는 대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성 있고 다양한 대학을 육성·발전시킴으로써 학습자와 사회 일반의 다양한 대학교육에의 요구를 폭

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 당국은 대학교육의 환경 조정자로서, 대학을 육성함에 통제자로서, 군림하기보다는 후원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됨은 물론 교육 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양적 대중화와 질적 대중화를 동시에 이룩할 수 있도록 대학에 대한 자세 변화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현재의 한국 사회 산업 구조를 직시하여 미래의 발전 방향을 토대로 한 고급 인력 수요·공급을 예측하여 대학교육 정원 정책을 재조정해야 될 것이다.

여섯째, 학력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등의 적극적 노력을 통하여 현실지향적·출세지향적·수단적 교육관을 대학교육 이념 및 대학의 기본 정신에 부합되는 교육관으로 바꾸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고등교육의 이념과 철학이 확고히 정립되어야 한다.

일곱째, 고등교육 제도의 폐쇄적·획일적 제도 운영을 지양하고 고등교육 체제를 보다 다양화하여 그 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해야 된다. 특히 전문대학을 단기 고등교육 기관으로 보다 내실 있게 육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대학으로 하여금 중견 직업인 양성 및 성인 계속 교육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확충하여 고등교육 접근에 대한 기대 좌절과 대학교육 결과 분배와 관련된 좌절감을 동시에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밝혀 두고자 하는 것은 전체 실업자 중에서 고학력 실업자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치적·사회적 불안도 높아진다는 사실이다.*